

이덕일의 '역사의 창'



독도 문제는 왜 반복되나

일본 문부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9종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모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 지도가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나가면 큰 일 난다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지면에서는 두 가지만 짚겠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고 주장한다. 제3자의 눈에는 국제사법재판소 가지는 일본이 정당하고, 이를 거부하는 한국이 부당한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동북아 특위 주최로 진술회가 열려서 지도 제작 측의 대표로 임기환 서울교대 교수가 나오고 문제 제기측의 대표로 필자가 나가서 발언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 47억 원을 들여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을 진행했다. 약 80여 명의 역사학자들이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를 지도로 그리는 사업이었다.

독도에 점 찍어 오기를 거부한 이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을 좌초시켰다는 이유로 필자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유무형의 수난은 "이 나라는 아직도 조선총독

부가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최소한 역사 문제만큼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북 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김도형 연세대학교수가 가장 먼저 기업을 토한 것이 "지난 4~5년간 외풍에 시달려온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었다.

진영을 넘어서는 이런 문제 제기 외에 이 나라의 모든 보수·진보 언론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사회 역사 문제의 적나라한 속살이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박정열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식욕 부진

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식욕 부진이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지고, 체중 감소가 심하며, 다른 정신적 증상이나 정신적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한다.

주의 깊게 살피고 치료해야 한다. 고령자들의 생리적·정신적 특성은 신체의 기능 및 면역력 저하와 이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빈도의 증가, 사회 활동의 감소로 인한 우울증 등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러한 고령자들의 생리적·정신적 특징이 식욕 부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자연이 선물을 주는 많은 식재료들과 그에 따른 맛있는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식욕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에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다고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다.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식욕 부진은 흔히 거식증이라고 불리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의 질병으로 인한 식욕부진은 악성 종양이나 결핵, 간의 질병, 내분비 문제, 소화기 질병 등 다른 장기의 문제로 주로 나타난다.

한의학에서는 고령자들은 오장(五臟)의 정기(精氣)가 쇠함으로 인해 장부와 그와 연관된 다른 기관의 생리 기능이 저하되어, 정혈(精血)이 고갈된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혈이 고갈되면 인체의 체액인 진액이 마르고, 진액이 마르면 소화액과 침샘 분비가 저하되어, 소화 불량이나 변비가 생기기 쉬워 식욕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식욕 부진은 먹고 싶다는 욕구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앞서 말한 계절적이거나 일시적인 식욕 부

특히 고령자에게서 다른 질환이 없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식욕 부진이 있는데, 이러한 식욕 부진은 그 자체가 다시 체력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기고

일제 강점기 사학 탄압으로 왜곡된 학교 역사



오미화 전남도의회의원

병 운동의 영향으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던 시기인 1908년 사립 법성포보통학교로 개교되었다. 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조선교육대관'이나 1916년 2월 23일자 '매일신보' '법성포보교와 유교(有敎)' 제목의 기사 그리고 광복 이후에 발간된 '전남교육사' 등 여러 문헌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된 학교의 역사를 되찾으려는 것이다. 법성포초등학교의 졸업 횟수 변경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지워진 역사를 되찾자는 의미이다.

'대한 독립 만세!'의 함성이 들릴 것 같은 3월이다.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삼일절이 올해 104주년을 맞이했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으로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더더욱 뒷집 지고 서 있으면 안 된다.

법성포초등학교 동문들은 학교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2018년 교육부에 졸업 횟수 변경을 청원했다. 결과는 불가였다.

일제는 1919년 법성포 독립 운동의 진원지를 사립 법성포보통학교로 지목했다. 그리고 이듬해 비협조적인 학교 탄압을 강화하고자 법성포에 있는 사립 보통학교 두 곳을 모두 폐교 조치하고 법성포공립보통학교로 재개교시켰다

법성포초등학교 동문들은 학교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2018년 교육부에 졸업 횟수 변경을 청원했다. 결과는 불가였다. 청원서는 영광교육지원청에서 심사했는데, 변경 불가의 이유가 "졸업 횟수를 변경해 얻는 이익보다 이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사립 법성포보통학교의 교지와 교사 그리고 1학년부 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학교 이름은 법성포공립보통학교로 개칭했다. 즉, 대한 제국 시대의 사립 법성포보통학교가 일제 강점기에 법성포공립보통학교로 바뀌었고, 사립 11회 졸업생이 공립 1회 졸업생으로 둔갑된 것이다.

학교의 첫 시작을 우리 조상들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세운 기점으로 바로 잡자고 하는 일을 어찌 '이익과 혼란'으로 단정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학교의 역사관을 수립해 자긍심을 높여주는 일이 이익을 따질 문제인지 의아스럽다.

법성포초등학교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역 주민들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학교였다. 그리고 학교 출신들은 일본의 총칼에 맞서 맨손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항거했던 선배들이었기에 일제 강점기 때만

社說

고삐 풀린 먹거리 물가에 서민 고통 더 커진다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 등 먹거리 가격이 크라카같이 치솟고 있다. 빵·과자·아이스 크림·생수에 이어 햄버거·치킨·피자 값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유로 빵과 케이크 가격이 6% 이상 올랐다. 외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광주에서 냉면이나 비빔밥을 사먹으려면 최소 1만 원은 있어야 한다.

배달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 치킨은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리기로 했다. '하니콤보'의 경우 2만 원에서 2만 3000원으로 15% 인상된다. 배달 비용이 3000~5000원을 넘나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에서 주문해 먹는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와 공공요금 인상은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상승했다. 남양유업은 다음달부터 두유 출고가를 평균 4.7% 올릴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SPC삼립과 파리바게뜨 등이 원재료비 상승을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햄버거와 피자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지난달 일부 메뉴를 각각 5.4%, 5.1% 인상했고, 미스터피자도 피자와 사이드 메뉴 가격을 4~5% 올렸다.

학생 국제 교류 기회 날린 어이없는 교육 행정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교 육행의 안이한 행정 때문에 국제 교류 기회를 어이없이 날린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국제 교육교정' (글로벌 아카데미)에 선발된 국내 22개 학교를 공개했다.

보훈처의 공문을 받고도 광주시교육청은 담당자가 깜박하고 일선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전남도교육청은 뒤늦게 알려 결과적으로 신청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

보훈처는 선발된 학교에 활동비 1500만 원을 지원해 온라인 화상 공동 수업, 상호 방문 교류 수업, 참전 전적지 탐방 등 활동을 돕는다. 결과에 따라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을 떠나 외국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 자체를 안 했으니 선정될 리 만무하다. 신청 자격은 최근 5년간 유엔참전국 14개 나라와 교류를 한 학교인데 교육청 담당자들은 지원 조건에 맞는 학교가 얼마나 학교간 일대일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학교는 선발 명단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신청한 학교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광주시교육청은 이점선 교육감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라는 국제 교류 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학생들을 처음으로 외국에 보내기도 했다. 단순한 행정 실수 탓으로 돌리기에 소중한 국제 교류 기회를 날린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차체에 교육청은 교육 행정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조직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점검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문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 국제설계공모에서 덴마크 건축 설계 회사 '어반 에이전시'의 작품이 선정됐다. 여기에 들어설 호텔, 복합쇼핑몰, 아파트 등의 건축물 높이는 주변 39층, 48층 아파트들을 모두 넘어서 광주 최고 높이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마르 업체는 자신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디자인을 제시했을까.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방-일방은 이미 지난해 말 부지를 한 개발 업체에 6850억 원을 받고 팔았다. 이 개발 업체는 은행·증권사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740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마침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후 발표바로 전에 아파트 30층, 상업시설 40층 중추 재한을 전격 해

광주시가 사전 협상을 통해 개발 이익의 어느 정도를 쟁길 것인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이 '계획'에도 없는 개발은 광주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길 것은 분명하다. 업체의 사업

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고층·초고층 아파트 개발 경쟁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도 걱정이다. 이는 시민과 미래에 기여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부담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공롭게도 당선작의 명칭은 '모두를 위한 도시'다. 과연 그렇가.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부유층의 도시이자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차지하는 토지 소유주 및 개발 업체를 위한 도시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충 아파트 숲이 조성된다는 의미다. 왜 덴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인내,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편집국인내,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전담부, 220-0649, 220-0652, 220-0663, 220-0642, 220-0680